

# 쌀 협상 이대로 끝인가?

**올** 해 최대 농정현안이자, 농민들에게는 생존권 여부가 달린 쌀 협상이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전히 정부는 협상내용과 국내대책을 공개하는 것에는 미온적인 태도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번 협상과 국내대책들이 농민들에게는 그다지 이로울 것이 없으며, 어떻게 마무리 되든 현재보다 더 피해가 클 것이라는 것은 두 말 할 나위 없다.

이번 호에서는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쌀 협상의 내용들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국내 대책들을 살폈다.

## 중국이 최대 변수

지난 3일 이번 협상의 최대 변수인 중국과의 6차 협상을 끝으로 사실상 실무협상이 마무리 되었으며, 현재 막판 고위급 담판으로 주중 한국대사

관과 농무관이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오는 12일 중국의 차관급인 상무부 부부장과 만나 최종 합의안에 대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국제 쌀 시장에서 최고의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무수입량 9%와 5년 유예 후 재논의, 57%이상의 시장점유율 대폭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여타의 국가들이 의무수입물량과 시장접근방식, 소비자시판 등과 관련해 우리와 대체적으로 합의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려 협상결렬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어느 정도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끝까지 강도 높은 요구사항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쌀 시장에 자국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 수출한 시장점유율

●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 협상내용

쟁점	UR방식	협상안
의무수입물량 (MMA)	국내소비량(86~88년 기준)의 4% (초기 5년: 0.25%, 후기 5년: 0.5%씩 증가)	8~9%
관세화 유예기간	10년	10년
소비자 시판여부	MMA물량은 전량 가공용	MMA물량의 10%(약 5만톤) 소비자 시판
MMA 수입관리방식	전량 국영무역 방식	국영무역 후 공매방출
시장점유율	중국: 57%, 미국: 28%, 태국: 15%	현 수준에 맞출 가능성이 큼

(57%)을 대폭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최근 3년간 시장점유율로 결정하자고 의견을 보여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의무수입량은 8~9%이며, 일부 소식통에 의하면 8.87%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화 유예기간은 10년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시판여부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나 대략 10%정도 수준이며, 수입관리방식은 전량 국영무역 후 공매방출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SBS(동시매매입찰)방식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우리 정부의 요구수준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는 했으나, 지난해 광우병과동으로 수입금지 된 미국산쇠고기와 오렌지 등에 대해 수입금지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농민 달래기 방안**

마무리 되고 있는 협상 수준이 농민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며, 협상 진행에 있어 농민들의 의견과 참여가 철저히 차단되었다는 점에서, 정부는 농민은 물론 전 국민의 거센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미 한농연에서는 오는 1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350만 농민대회'를 예고하고 있으며, 전국농민연대에서도 오는 13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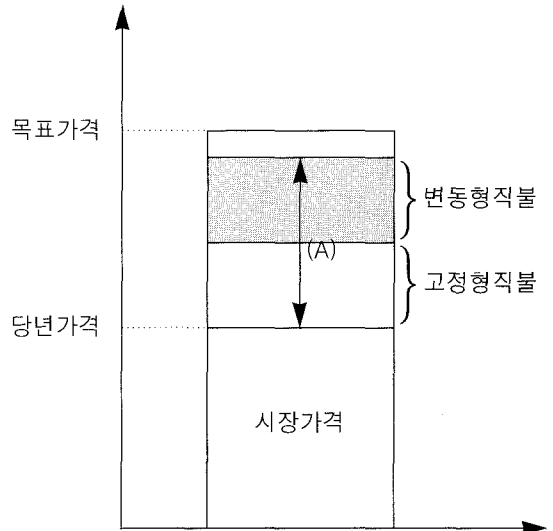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자 정부는 오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 쌀 농가의 '소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7일에 농민과 국민, 정치권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합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기만적인 쌀 농가 '소득안정대책'**

정부의 '소득안정대책'의 큰 골자는 최근 3년간 산지 쌀 값(162,640원/80kg)과 현행 직불제를 합한 평균 소득인 170,070원을 목표가격으로 설정하고 향후 3년간 목표가격 보다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보전방식은 직접지불로 하되 기존의 논농업직불제를 고정형직불제로 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변동형직불제로 개편해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 또한 현재 추곡수매제에서는 450만석만 혜택을 보지만, 소득안정대책이 시행되면 연간 쌀 생산량인 3400만석 전체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안정대책'은 쌀 농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소득보장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A) : (목표가격 - 당년가격)의 일정부분

●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발표된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정부시안

- 2003 산지쌀값 : 162,640원/80kg
- 목표가격 : 170,070원/80kg
- 고정형직불 : 60만원/ha(9,836/80kg)
- 변동형직불 : [(목표가격 - 당년쌀값) × 80%] - 9,836원

구분	03년 가격대비	1%하림시	2%	3%	4%	5%
○ 당년 쌀값(A)		161,014	159,387	157,761	156,134	154,508
○ 직접지불(B)		9,836	9,836	9,847	11,149	12,450
- 고정형		9,836	9,836	9,836	9,836	9,836
- 변동형		-	-	11	1,313	2,614
농가수취수입(C) : (A+B)		170,850	169,223	167,608	167,283	166,958
목표가격대비		100.5%	99.5	98.6	98.4	98.2

첫째, 목표가격인 17만원은 물가상승율과, 국세유가 폭등과 그로 인한 농기자재가격의 상승, 농지임차료 상승 등 생산비 상승요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둘째, 목표가격인 17만원이 마치 매년 17만원 모두 보장해 줄 것처럼 잘못 인식 할 수 있으나, 시장가격의 차액의 80%만 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지로는 보장되는 액수는 17만원 보다 훨씬 적다. 따라서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할수록 더 작아 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시장가격이 15만원인 경우 목표가격과의 차액인 2만원의 80%인 1만6천원만 지원해 실지로 보장되는 가격은 16만6천원이 되는 것이다.

셋째, 3년 이후 목표가격은 농림부장관이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비상승분과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의 목표소득수준을 정부가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넷째, 현재 추곡수매제와 논농업직불제를 통해 보장되는 수준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어 그다지 획기적인 소득안정대책이 아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얘기다.

다섯째, DDA농업협상이 사실상 적용될 수 있는 시기이다.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은 DDA 농업협상의 타결 이후 국내보조금 감축률이 어떻게 정해지는가를 보고 나서 다시한번 논의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보조금 감축 여하에 따라 대책이 축소되거나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3년 후에는 참여정부가 끝나는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구조상 참여정부가 끝나서도 '소득안정대책'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지 의

문이다.

결국 올해 초 한·칠레 FTA를 체결하면서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들처럼 진정한 농업회생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며,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 신뢰를 주지 않는 이상, 정부의 쌀 가격 인하 정책기조 아래서 '우는 애 달래기' 식으로 나온 대책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둔다.

### 17일, 때늦은 '국민토론회'와 위험천만한 관세화 주장

정부는 이번 협상내용에 대해 오는 17일에 농민과 국민, 정치권이 참여하는 '국민토론회'를 개최해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합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토론회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현재 기대 이하의 협상안 수준과 다른 하나는 현재의 협상안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틈을 타 일부 개방론자들은 관세화해도 DDA농업협상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390% 이상 고율관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현재 국제가격이 높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량은 현재 보다 적을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 최근 국책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관세화의 확률적 동등성 분석(서진교)」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관세가중치를 임의로 주었고, DDA에서 결정되는 세부원칙의 내용,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신빙성에 한계가 있다.

결국 이번 토론회는 '현재 협상안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면 더 큰 피해가 오는 관세화로 가겠다.’, ‘관세화가 싫으면 현재 협상안을 수용하라’ 라는 암묵적인 강요에 다름 아니다.

애초에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협상진행에 참여를 보장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협상 태도이다. 그런데 애초부터 농민과 국민의 입과 귀를 차단하고 이제 와서 어처구니 없는 협상내용에 동의해 달라는 식의 태도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

### 고품질 브랜드가 최선책?

‘이제 그만 농산물 개방을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라.’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언론과 지식인들 그리고 정부의 공통된 ‘대안 아닌 대안’이다. 고품질·친환경 브랜드 농산물이 최근 많은 소비자들에게 각광 받고 있고, 일부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350만 농민들이 쌀 개방과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하락하고 농민생존권이 박탈당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식량주권’이다. 쌀 개방은 바로 식량주권의 박탈이고 우리 민족 전체의 생존권이 상실 되는 문제이다. 때문에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고 식량주권을 위협받지 않을 수 있는 협상진행과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농연**

## 우리의 입장

### 실질적인 소득안정대책을 마련하라!

정부가 소득안정대책을 내놓았으나 그 동안의 농정불신을 만회하고 쌀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의지가 있다면,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다음과 같이 개편해야 한다.

첫째, 이번 소득안정대책이 실질적인 대책이 되려면 생산비 상승분과 물가상승분이 목표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소득대책을 법제화하고 목표가격 설정 시 반드시 농민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직불금 보전수준을 80%에서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

### 추가개방저지 목표를 확고히 하라!

‘관세화냐 현 협상수준 수용이냐’ 식의 터무니없는 선택안을 가지고 농민과 전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협상의 종료까지 추가개방저지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우리의 식량주권을 보호하고 농업이 회생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